

# 국힘, '한동훈 제명'에 내홍 격화... 韓 “반드시 돌아올 것”

친한계 “장동혁 지도부, 책임 지고 즉각 물러나야”  
초·재선 모임 “최악의 일 벌어져... 강한 유감 표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이 29일 확정되면서 당 내홍도 격화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제명 결정에 반발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에 퇴진을 요구했고 소장파로 불리는 일부 초·재선 의원들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검은 정장에 어두운 갈색 넥타이 차림의 한 전 대표는 발언 도중 어두운 표정으로 침묵하기도 했다. 짧게 발언을 마친 뒤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다.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선거는 저도 좋으니 당권 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회견문은 고동진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고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김진·박정호·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규·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물론, 통합이 절실한 이때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썩선의 정치를 선택하는 것인가. 이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가치를 세우 국민께 박수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라”며 “당의 통합과 화합, 당 밖의 합리적이고 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관한 입장발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스1

식적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 입장문에는 권영진·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송석준·신성범·염태영·우재준·유용원·이성권·정연욱·조은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친한계 중진인 송석준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송 의원은 이날 개인이 낸 성명에서 “당을 쫓아내는 무모한 결정을 감행한 지도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도를 벗어난 무모한 결정은 제 발등에 도끼 찌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 시간에 의원 한 분이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사무총장이 (징계)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내 유일한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한 전 대표의 징계 이유는 사실 별 게 없다”며 “그럼에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탄핵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다는 점에는 너무나 동의한다”면서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제명한다면 계엄 사과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내 갈등의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며 “장 대표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건 한 전 대표 제명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다”고 덧붙였다.

친한계인 박정호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앞두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해극을 벌이고 있는 정당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제명한다면 장동혁 지도부도 다 제명해야 된다”며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겠다고 제명 결정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는가. 사익을 위해서 당을 사지로 내몰고, 당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건 제명 사유”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 뒤에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제명한다면 장동혁 지도부도 다 제명해야 된다”며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겠다고 제명 결정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는가. 사익을 위해서 당을 사지로 내몰고, 당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건 제명 사유”라고 했다.

## 광주시·전남도, ‘통합 타운홀미팅’ 연다 방송3사 주관 2월 4일부터 서남권·광주권·동부권 순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권역별로 시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방송 3사(광주MBC, KBC, KBS광주)가 주관해 서남권·광주권·동부권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타운홀미팅에는 시민대표단이 참여해 통합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광주시는 경제·환경·문화 등 10개 분야의 직능별 공청회도 운영하는 등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타운홀미팅은 먼저 서남권에서 열린다. 서남권 합동공청회(KBC 주관)는 2월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남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된다.

이어 광주권 합동공청회(광주MBC 주관)는 2월10일 오후 1시55분부터 3시55분까지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합동공청회(KBS광주 주관)는 2월13일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확정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남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도 마련한다.

29일 광주시와 인접한 동일 생활권인 장성군을 시작으로 ▲1월30일 여주시 ▲2월5일 영광군 등에서 ‘도민과 상생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생토크에서 나온 시·군 특성과 주민 관심사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시민 삶에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권역별로 체감하는 현안과 우려를 직접 듣는 자리”라며 “방송 3사와 함께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시민 삶에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권역별로 체감하는 현안과 우려를 직접 듣는 자리”라며 “방송 3사와 함께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특별법 ‘초읽기’... 광주·전남 통합, 의회 동의 언제, 어떻게

2월 2일 국회 개회... 상임위 개회 전 시·도의회 찬반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늦어도 다음 달 2일 당론으로 발의키로 하면서 관심사는 최종 관문 격인 광주·전남 시·도의회 동의에 모아지고 있다.

29일 시·도의회에 따르면 행정통합은 통상 공감대 형성의 핵심인 입법, 최종 통합 등 크게 3단계를 거쳐야 된다. 광주·전남 통합의 경우는 시·도지사·정치의원의 의기투합과 정부·여당의 파격적 지원 약

속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공론화와 설계·입법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다.

시·도단체장 통합 선언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늦어도 다음 달 2일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청, 시·도의회 TF 민관협의체, 정부 4대 인센티브 등을 토대로 400여 조항에 400개 안팎의 특례가 담긴 법안이 마련됐고, 민주당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쳐 이른바 30일 최종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다.

입법지원단은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됐고,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명칭, 청사, 특례는 대부분 합의됐고, 교육자치와 통합의회 의원 정수, 통합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 이전 대상 정부 부처와 기관 명문화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다.

실질상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다음 법사위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도의회 동의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선행 절차로, 의견청취 기한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기한은 통상 소관 상임위(행안위) 법안 논의 전까지, 방법은 찬·반 투표로 이뤄진다.

경북도의회는 전날 행정통합 찬반투표 결과, 출석 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통합안을 가결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2024년 12월, 재석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재석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2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시·도의회 동의’를 사실상 의무화했고,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내달 2일 개최하는 제341회 임시회와 30일로 예정된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의 일정에 맞춰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통상 의회 회기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해 왔지만, 지난 27일 통합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긴급 의안으로 제출됐다.

6월 지방선거 일정과 선거법상 공직사퇴 시한이 선거일 전 90일, 즉 3월5일로 규정돼 있어 2월 말까지 법안 통과가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의회 관계자는 “국회 개회와 교섭단체 연설 일정만 잡혔을 뿐 국회 행안위 개회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예측 불가한 만큼 의회동의 절차인 의견청취는 1월 중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